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5. 3. 청구인에게 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용중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층에서 ○○○○을 운영하는 자로, 2018. 4. 9. ○구청 새울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청구인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검토 의뢰가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2018. 4. 16. 청구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약63㎡)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 5.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위반[대기배출시설(차량 언더코팅) 미신고 설치·운영]으로 대기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익큐브사의 WSX7000 제품 개발 연구소 공식문서에 의하면, MSDS 8번 항목에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에 “티타늄다이옥사이드와 칼슘카보네이트(분말 물질)는 제품 내에서 강하게 결합되어 분리되지 않으므로 분진 흡입유해성에 미치지 않음” 이라고 나와 있고,

나. 청구인은 통에 담아 분사하는 방식이 아닌 전용장비를 활용하여 시공하며, 언더코팅 시공 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동력 2.25KW 미만인 1.5KW의 전용 장비에 체결하는 전용 에어컴프레서를 사용하므로, 언더코팅 분사를 하더라도 대

기 중에 분리되어 노출되지 않고,

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MS폴리머 제품을 실제 사용 장비로 측정하지 않고, 제품 샘플로만 측정한 것은 부적절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은 연간 2톤 미만의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배출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바,

라. 친환경 물질이라고 여기고 영업을 해온 청구인과 직원들의 생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자동차 하부의 도장(언더코팅)을 하면서 도장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WSX7000(15개)를 사용하여 용적 약63㎥ (5.3m(W) × 3.3m(L) × 3.6m(H))에서 자동차 도장을 한 사실이 있고,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따르면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포함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는 배출시설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설치허가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대기오염물질인 입자상 물

질이 배출되므로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4.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23조, 제8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134조 [별표36]

#####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층에서 ○○○○을 운영하는 자이다.

2) 2018. 4. 9. ○구청 새울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청구인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검토 의뢰가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2018. 4. 16. 청구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약 $63\text{m}^3 = 5.3\text{m(W)} \times 3.3\text{m(L)} \times 3.6\text{m(H)}$ )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8. 4. 17. 국립환경과학원에 NoVHa-2000, XSW-7000을 사용하여 압축기(3.7KW)에 연결된 스프레이건을 사용한 자동차 언더코팅을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2018. 4. 24. “공정 중 티타늄다이옥사이드, 칼슘카보네이트 등으로 인한 입자상물질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4) 이에 피청구인은 2018. 5. 1. 환경관련법규 위반자 고발의뢰, 2018. 5.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위반[대기배출시설(차량 언더코팅) 미신고 설치·운영]으로 대기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18. 5. 10.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다. 판 단

### 1)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는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3]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제5조와 관련한 [별표3] 중 25) 도장시설에서는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천 ○구 ○○로 ○○○(○○동)에서 자동차 하부의 도장(언더코팅)을 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것을 이유로 동법 제84조, 동법 시행규칙134조 [별표36]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 피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건데, 청구인 스스로도 자신이 용적 약 63세제곱미터 상당의 공간에서 자동차 도장작업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구인 운영의 도장시설의 면적은 그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동법 시행규칙제5조와 관련한 [별표3] 중 25) 도장시설에 규정되어 있는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로서,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규정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그러한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 및 직원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도

장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뿐, ○○○○을 운영하면서 도장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기에, 결국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 마땅하다.

##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